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노동규율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을 의미한다

▶ 관련 기사 9, 12 면

(마르크스 《자본론》 제21장)

사드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의 시작인가

3 면

정부 경제 정책 비판
긴축과 집값 상승으로
고통 전가 말라

4 면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6~7 면

새 교원노조 건설
계획은 정부에
투항하는 것

5 면

이집트
파업 노동자를
군사재판에 회부한
독재정권 규탄

11 면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판결의 의미

6~7 면



누구의 딸일까요?

“우리 주에서) 지금 당장의 적은 압도적 다수인 유색인종이거나 히스패닉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다음 날 야당 의원에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 X빠는 놈아.”

미국 메인 주(州)의 공화당 주지사 폴 르페이지

“인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본적인 것으로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치마를 입지 말 것”
성범죄가 여성 옷차림 탓?
인도 관공부 장관 새르마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하지 말라.”
우병우를 감싸는 듯한 박근혜,
누가 보면 부패 척결 투사인 줄 알겠네

“기밀 누설”
검찰이 특별감찰관 이수석을
압수수색한 이유

“우병우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속이 타는 듯한 김무성

“TK가 [사드 배치를] 반대할지 몰랐다.”

국방부 고위관계자

“[사드보다] 훨씬 출력이 심한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 그 래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모르고 잘 살고 있고 실제로 해가 없다.”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그래서 그의 결론은
“사드를 비밀리에 배치하자”

“6·25 전쟁 이후 60년 간 수백 만 평을 군부대 훈련장 등으로 내주고 매일같이 포탄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많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안보를 위해 사드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그런데 김영우 당신은 무엇을 희생?

“전쟁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텐데”
신임 경찰청장 이철성이 용산참사에 대해
내뱉었던 말

“무소유가 주는 자유로움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 줬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조운선의 과거 발언,
1년 생활비 5억 원 소비의
자유로움을 아는 사람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국제다국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
을 준비하다

★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러

★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에 돌입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
자들

★ 세종호텔
현장 노동자 97퍼센트가 성과연봉
제를 반대하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김지윤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보도 등으로 이슈를 전환한 경위,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실, 전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이정현과 KBS 대표이사 길환영,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등이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참사 당시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해수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핵심 인물들이 증인석에 앉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과 같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실 규명의 과제를 다시금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침몰 원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침몰 원인 주장—대각도 조타에 따른 급변침—을 인정하지 않고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차 청문회에서 검찰이 엉터리 항적도로 조사를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특조위는 세월호가 참사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정부가 침몰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방부가 철근 조달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황도 포착됐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인양

침몰 원인을 밝히려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는 객실을 선박에서 분리하는 방식(객실 직립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환하게도 해수부는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미수습자 수습의 시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16가족협의회는 분리 과정에서 선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인



김이리 기자

절박함 더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유가족들.

“제주 해군기지 공사 때문에 철근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제주 해군기지 완공이 늦어져 해군과 정부는 애를 태우고 있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 중 하나다. 지금도 정부가 사드 배치 강행과 미국

패권 독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에서 보듯 지배자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를 통해 철근 과적 경위와 침몰에 미친 영향을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드러내 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양 전 준비를 한다면 수습 시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해수부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조위도 “세월호 참사 제1의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해 세월호 참사를 영구미제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다. 이미 선체에서 해수를 빼낸다는 이유로 1백여 개 구멍을 뚫어서 선체 보존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선수들기 실

패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됐고 닻과 불워크(갑판 부위에서 파도를 막아주는 울타리) 등도 제거됐다. 그런데도 또 세월호 하부에 천공 34곳을 뚫을 것이라는 해수부 계획에 대해 특조위는 “필수적 조사 대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공 작업으로 인양 시기가 늦춰지면서 올해 안에 인양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증거를 훼손하면서 선체 인양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 대응과 진실 왜곡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은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 있다. 해경은 최초 신고가 있는 지 한참 후에야 작은 경비정을 출동시켰을 뿐이고 대피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구조 세력들은 깜깜이 출동을 했고, 해경이 계약을 맺은 민간 구조업체를 기다리느라 해군 등의 도움 요청도 거절한 듯하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경이 교신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도 나중에 드러났다. 1차 청문회에서는 잠수사 투입 인원과 횡수를 부풀려 언론에

알린 것도 밝혀졌다. 경찰은 바다에선 그토록 굼뜨고 무능하더니 육지에서의 탄압에는 능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덤미가 잡혔고, 진실 규명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하며 진실 은폐에 일조했다.

“보도통제”

6월에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은 보도 참사의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정부 비판

내용을 줄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통화 녹취록이 언론노조를 통해 폭로됐다. “보도통제”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라는 황당한 감싸기로 분노를 키웠다. 드러난 것은 KBS 보도 개입뿐이지만 과연 다른 언론사들에게는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을까? 언론들이 일제히 유병언 수사 보도에 열을 올리도록 누가, 어떤 힘을 행사한 것일까? MBC가

유가족들을 비난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진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도 밝혀야 할 과제다. 3차 청문회 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도 진상 규명의 대상이다. 특조위 3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따라서 특조위 종료 시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8월 25일부터 유가족들은 더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 농성을 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반기 청문회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안 상정조차 회피하면서, 별도 기구를 설치해 선

제조사를 보장하도록 추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는 “합의”라고 떠들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이 문제에 진지하지 않은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확대하자 당 대표가 된 추미애는 청문회 국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은 약속하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항의 운동이 확대돼야 한다. 9월 30일이면 정부가 못 박은 특조위 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난다. 박근혜 정부는 9월 30일 이후 특조위 청산 과정을 밟아 진실 규명 운동을 꺾

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총선 패배의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우병우 블랙홀’에 빠져 분열과 위기를 겪고 있다. 유가족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은 자발적인 동조 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개정과 온전한 인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우리 운동은 자신감을 갖고 세월호 진실 규명의 열망을 모아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김영익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대결 구도가 재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결

그러나 신냉전론은 여러모로 오늘날의 제국주의 상황의 일부 측면을 과장하는 면이 있다.

냉전 체제는 국가 간 경쟁이 미·소 양대 초강대국 진영이라는 양극적 틀 안에서 옥여넣어져 미·소 각각의 동맹국들이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질서였다. 양대 초강대국 진영으로 세계가 분할된 것은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개별 국가들한테 동·서 양대 진영 중 하나의 이해관계에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축색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냉전 질서가 오늘날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냉전 때만큼의 압도적 패권(헤게모니)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패권을 유지하려 애써 왔지만, 이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력 분포가 장기적으로 변화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해 온 반



지금도 '신냉전' 상황이라고 보면,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나 모순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면, 유럽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특히, 중국)은 역동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미국의 만류에도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중국이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다. 냉전 때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도 한국의 기성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처럼 한미동맹 ‘올인’을 고수하는 게 수지타산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즉,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국들을 다루는 게 전보다 어려워진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다른 지역들로 역량을 분산시켜야 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해 온 것과 병행된 중국의 군비 증강은 이 지역의 바다를 지배해 온 미국의 패권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집중

그러나 미국의 경쟁국들이 전보다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두고 신냉전의 도래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부르다. 비록 소련 붕괴 직후에 전취 러시아가 경제가 일부 회복됐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아직도 매우 크다. 더구나 러시아 경제는 만성적으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세계 금융시장에 통합돼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압박에 취약하다.

중국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미국을 따라잡으

려면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중국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간 위기 없이 순탄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나 실현 가능한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려 애쓰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행동은 다른 주변국들의 경계심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자신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 한다.

따라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현 질서를 “미국과 중국의 세력 교체 시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에 놓인 현격한 힘의 격차를 간과하는 것이다.

현 세계 질서는 냉전 때처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적 질서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을 벌이며 다극화하는 양상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세계 1·2·3위 경제대국들이 제국주의간 경쟁을 벌이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역대 국가들도 군비를 경쟁적으로 늘리며 거기에 가세하는 행국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드 배치 문제도 결국 역내에서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영향력을 제고해 중국의 도전을 꺾어 버리려는 미국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오늘날의 제국주의 질서가 신냉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세계가 평화롭고 자유롭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열강의 이해 각축으로 세계는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장기적 미래에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신냉전론에 비판적인 까닭은 그것에 깔려 있는 정치적, 전략적 함의 — 불안정성 — 때문이다.

진보진영 일각의 신냉전론 ①: 중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냉전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 대결이었다고 여전히 오해한 채,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제국주의적 패권 정책’과 중국의 ‘대안 경제 모델’·‘패권 견제’가 맞부딪히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런 주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하는 진보적 세력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진영 논리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군비 증강이 미국 군사력을 견제하는 구실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미·중 세력교체기’라는 전환점을 뒤집으려고 미국이 획책하는 전략이나 음모로 보게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근 국면으로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지, 미국 같은 특정 국가로 환원되는 게 아니다. 중국은 자본 축적을 지속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선 안 되지만,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위계 질서 속에서 꼭대기에 도전하는 국가를 두고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국이 국제 관계에서 진보적 구실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반제국주의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데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한국 지배계급 내에도 중국과 연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중국에 기대를 품는 것은 반제국주의 운동이 반자본주의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자칫 자국 지배계급 일부와 동맹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진영 일각의 신냉전론 ②: 대안은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진영 논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로 고착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진보진영 일각에 적지 않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질서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굳어지고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묶이면,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또다시 냉전적 대결의 무대가 될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염려의 근거에는 한·미 동맹에 관한 정당한 불신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공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실현 등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곤 한다. 신냉전이 고착되기 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이뤄 내야 한반도에서 신냉전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남북 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로서 냉전 구도를 해체하고 동북아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섞여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 협상 촉구 같은 요구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의 요구로 채택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평화협정 체결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교 협상을 통해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수밖에 없다. 현존 제국주의 체제가 온존하는 한, 그 어떤 형태의 국가 간 협정이나 약속이 맺어져도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을 항구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평화 정착의 주체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엄청난 수준의 군비 경쟁을 벌이는 이 국가들은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데다,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이후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의 관계는 이미 매우 악화했다.

국가 간 외교 협상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기존 정당의 정책 자문 구실을

하려 하거나 정부 외교 정책을 견제하는 제도권 야당 구실을 하기 쉽다. 더 나아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수행할 개혁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거나 아예 그런 정부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외교관계 중심의 접근법을 기피하는 것이다.

맺으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견해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중국 정부에 기대거나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실천에서 협력하는 한편, 왜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제국주의 국가이고 우리가 결코 기댈 수 없는 세력인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관돼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평화운동은 왜 결국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 노동자 운동과 만나야 하는지를 참을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강동훈

정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놴.

OECD 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으로 떼가는 돈을 뺀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백64퍼센트로, OECD 23개국 평균(1백30.5퍼센트)보다 3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9.9퍼센트포인트가 상승한 것인데, OECD 23개국이 평균 1.6퍼센트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2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도 한국은 2015년 기준 88.4퍼센트로, 미국(79.2퍼센트), 독일(53.6퍼센트), 일본(65.9퍼센트) 등보다 높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12년 말 9백63조 8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1천2백57조 3천억 원으로, 3년반 만에 2백93조 5천억 원 늘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2백2조 원, 이명박 정부 5년간 2백92조 원 증가한 데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6.5퍼센트와 11.2퍼센트로, 2013년의 5.8퍼센트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54조 2천억 원이 늘어났다. 상반기 증가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23조 6천억 원이나 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집단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개별 심사 없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빌려주는 대출로 실제로는 곧장 건설회사들에 지급된다. 집단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11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면 이런 집단대출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대출 자체를 억제하지는 않고, 공공택지 공급 축소, 아파트 신규 분양 억제 등 주택 공급 축소 정책을 내놴.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줄어들고, 그만큼 집단대출이 감소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대출 조건은 유지한 채 주택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이미 올라 버린 분양 가격은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8·25대책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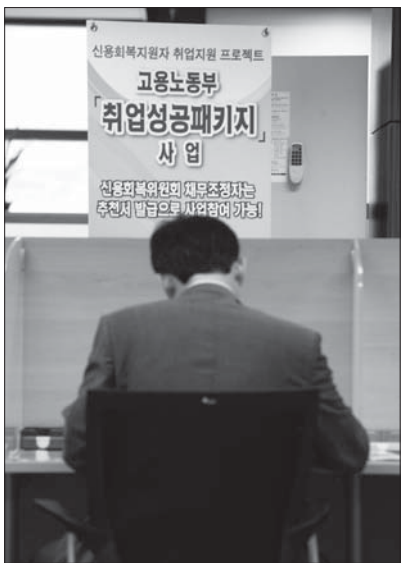
지난해 분양 물량은 예년 평균(27만



박근혜 정부는 이미 치솟은 집값을 유지하려고 주택 공급 축소 정책을 내놴.

가구)의 갑절에 육박하는 52만 5천 가구였다. 국토부는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5~30퍼센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올해 1~7월 분양 물량은 24만 2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겨우 3.9퍼센트 줄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7월까지 41만 가구가 넘어, 지난해보다 오히려 8.8퍼센트 많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분양이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주택 준공까지 2년 남짓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부터 막대한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급증할 위험이 커졌다. 실제로 7월까지 미분양은 6만 3천1백27호로 집계돼, 2013년 11월(6만 3천7백9호)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경제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이자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게 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노동자들과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기관 전체에 타격을 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정부가 집값 하락과 가계부채 악화, 금융기관 부실화를 걱정하는 것은 단지 주택 공급이 급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투자자금이 미국 등지로 유출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충격에서 우리 경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9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2백66억 달러(약 30조 원)가 유출된 바 있다. 이처럼 자금이 유출되면 한국도 저금리를 마냥 유지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여타 신흥국 경제 불안이 가중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감소하고 있는 수출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부채 위험성을 크게 본다는 점은 최근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추경 11조 원 통과를 추

진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안을 보면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1.2조 원과 올해 예산안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9.8조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더 걷은 만큼 더 쓰겠다는 수준이어서 전혀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니다.

게다가 추경의 지출 내용을 보면, 1.2조 원은 국채 상환, 1.8조 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출자·출연, 3.7조 원은 지방 교부금 확대, 5천억 원은 외환평행기금 출연 등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국가채무 감소와 국채은행 지원 등 금융 안정에 쓰인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6백44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6백37조 8천억 원이 돼 오히려 7조 1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슈퍼 예산'이라는 정부의 호들갑과 달리 내년 예산도 전혀 확장적 재정 편성이 아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무릅쓰고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며 내년 총지출을 2016년보다 3.7퍼센트(14.3조 원) 늘어난 4백조 7천억 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경안을 포함해서 비교하면 정부 지출은 고작 3조~4조 원밖에 늘지 않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급감하고 있다. 2015년에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6조 7천억

원이 감소했다. 2012년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2조 원 적자였으나, 2013년에 5조 4천억 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4년에는 11조 3천억 원, 2015년에는 12조 5천억 원 흑자를 달성했다. 최근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극구 거부한 이유 중에는 공공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국가채무를 비롯해 공공부채 감축에 열을 올리며 사실상 건축 정책을 펴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이나 브렉시트 등으로 나타날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을 피해 보려는 시도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2.7퍼센트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낮췄었으므로 석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건축 정책이 낳을 경기 침체 위험을 피하려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했고,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빚을 지면서 가계부채는 급등해 왔다.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은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서로 모순된 목표를 달성하려 애쓰는 정부의 처지를 보여 준다.

정부의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건축 정책과 집값 상승 정책으로 이루려 하는 목적이 경제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점이다.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8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는 격론 끝에 교원노조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을 통과시켰다. 2백42명 중 1백71명이 찬성했다. 70.7퍼센트 찬성으로 규약개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약 개정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이 올 12월에 새 노조를 건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재편모임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틀 안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재합법화는 “매우 지난하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 재편하자고 주장한다. 전교조 해체론이다.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안에는 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전교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재합법화를 공식 결정했지만, 현행 교원노조법의 틀 안에서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교조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표현된다. 재편모임도 지난해에 결성돼 전교조 안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이견을 억압하기 위해서라거나 그런 이견을 조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전교조 내부에서, 전교조에 대립해 정부에 투항하려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약 개정은 바로 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완전히 정당한 조치였다.

조합원 다수는 재편모임의 구상을 반대한다

대의원대회 직후 재편모임은 조합원 의견 수렴 없이 규약을 개정했다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와 대의원대회를 “반민주”적인 “독재 기구”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 결정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교원노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여러 시간 진행된 치열한 논쟁과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대회는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선출된 대의원들의 대표성을 조금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편모임이 과연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재편모임에게 대의원대회 위에 군림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합원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재편모임이다.

2013년 10월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 70퍼센트는 박근혜 정부가 강요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라고 강요했지만, 조합원들은 법외노조의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정부의 부당한 강요



굴복이 아닌 투쟁! 이미 전교조 조합원 다수가 투쟁을 통해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를 선택했다. 5월 28일 전국교사대회.

를 거부하고 저항을 택했다.

재편모임의 새 노동조합 계획은 2014년 12월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도 지지받지 못했다. 김은형 재편모임 공동대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새 노조 계획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후보 3팀 중 가장 적게 득표했다(23.66퍼센트). 법외노조 탄압과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으뜸 공약으로 강조한 변성호 현 위원장이 50.23퍼센트를 얻어 당선됐다.

이렇듯 조합원 압도 다수의 선택을 간단히 무시하는 재편모임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말하고 전교조의 주요 의결기구들을 “독재 기구”라고 비방하는 것은 듣기 고약하다.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복수 노조 시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재편모임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억지스럽다.

전교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전교조를 재합법화하는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편모임은 전교조를 해체해 부문별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들은 전교조 내부로부터 전교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킬 활동

(주장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행동)을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우리도 단결 선택의 자유(“노동기본권”)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구체적 현실에서 전교조를 약화시킬 것이 뻔한 활동까지 단결 선택의 자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교조가 약화되면 진정한 많은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받을 것이다. 그리 되면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자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편모임의 “노동기본권” 운운은 진정한 의미의 단결인 투쟁 속의 단결이 아니라 그저 다원주의 예산론처럼 들린다. 다원성과 다원주의는 구별해야 한다.

합법성 제일주의

재편모임은 교원노조법과 전교조 규약이 이중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전교조 안에서 새 노조를 만드는 것을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교조는 전국적인 단일 조직 방침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전교조 본부와 각 시·도지부가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 따라서 부문별 노조들의 연합체라는 새 노조 건설 계획은 전

교조 규약에 위배된다.

게다가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이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더 크게 단결해야 힘을 키울 수 있다. 재편모임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을 쪼개면 힘이 분산될 뿐 아니라 부문별 간막이 현상이 커져 교원들 사이의 불균등성이 심화된다. 오히려 전교조가 공립교원과 사립교원, 유초중고 급별을 통합해 출발했기 때문에 교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거의 동일하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사실 새 노조 계획의 진정한 동기는 합법주의다. 지난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이들이 발기인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재편모임은 어떻게 해서든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성은 교육을 바꾸고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위한 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2013년 10월 총투표에서 조합원 70퍼센트는 합법성 그 자체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투쟁하는 전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편모임은 합법성에 목을 매다 보니 투쟁하는 전교조에도 반대한다. 재편모임 공동대표인 김은형 교사는 2014년 12월 위원장 선거 때 네이스 투쟁 같은 대정부 투쟁 때문에 조합원이 급감했다며, ‘선도 투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쟁점에서도 노골적인 양보안을 공약했다.

네이스 투쟁은 2003년 5월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대해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 것을 가리킨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인권 침해 판정도 무시하고 네이스 전면 시행

을 밀어붙이려다 초래한 사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심지어 졸업생까지 포함해 무려 2천만 명의 신상 정보를 조사·집적하려는 네이스 시행에 반대한 투쟁은 고립되기는커녕 많은 학생과 학부모 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대정부 투쟁이 전교조 조합원 감소를 낳았다는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다. 전교조가 규약시정명령과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단호하게 저항하자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는 줄지 않고 늘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합법성 제일주의, 대정부 투쟁 외면, 양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난해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잘 보여 준 바다. 그는 양보 교섭으로 일관하다 배신적 타협을 했고, 이를 대의원들이 거부하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고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새로운 합법 노조 설립이나 가입을 통해 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새 노조가 필요하다는 재편모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백기 투항하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교조는 거듭 거듭 저항을 선택했다. 그래서 재편모임의 새 노조 건설 계획은 결코 조합원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대의원들이 재편모임의 합법성 제일주의가 아니라 투쟁하는 전교조를 지지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실상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공격에 문을 열어 주는 구실을 할 뿐인 새 노조 계획을 단호하게 반대하자.

※ 이 글은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월간 신문 <벌떡교사들>이 2016년 8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해고자 배제를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전교조 조합원들 2013년 10월.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하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정진희

넥슨의 성우 해고에 항의해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7월 20일 발표한 논평을 당 지도부(상무위 원회)가 7월 25일 철회한 뒤로 정의당은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다. 최근 정의당 지도부는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및 메갈리아 사태를 사유로” 탈당한 당원이 8월 25일 현재 5백48명이라고 밝혔다.(탈당은 문예위 논평에 반발한 측과 지도부의 논평 철회에 반발한 측 양쪽 모두에서 일어났다.)

정의당 지도부는 젠더TF를 구성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8월 26~29일에는 젠더TF 위원 대다수(7명 중 5명)가 지도부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젠더TF는 정의당 지도부가 젠더 문제와 관련된 당내 이견을 좁히고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겠다고 만든 기구이다. 원래는 8월 말에 젠더TF가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사임한 위원들은 상무위가 8월 25일에 젠더TF와 상의 없이 관련 성명(‘최근 당내 현안과 관련한 상무위원 회 논의결과’, 이하 상무위 성명)을 발표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당내 이견을 좁히기 위한 토론회를 젠더TF 주도로 하라고 해 놓고 상무위가 입장을 발

표해 젠더TF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것이다.

몇몇 위원들은 상무위 성명 내용에도 반발했다. 가장 선명하게 반대한 위원들은 류은숙 여성위원장과 박지아 성평등강사단장이었다. 그들은 상무위 성명이 “극단적 미러링을 운운하며 여성운동을 갈라치고, 여성운동을 부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위 성명은 메갈리아의 “극단적 방식의 미러링과 무분별한 혐오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메갈리아 현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에 주목”하며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썼다.

진정한 쟁점

문예위 논평 발표와 철회 이후 정의당 안에서는 메갈리아에 대한 태도 문제가 핵심 쟁점인 것처럼 돼, 논쟁이 그걸을 중심으로 열리게 왔다. 정의당이 메갈리아 친화적 정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는 당 일자의 반발을 사실상 수용해 정의당 지도부가 문예위 논평을 철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메갈리아에 대한 태도 문제는 토론할 만한 쟁점이다. 그러나 정의당 지도부의 문예위 논평 철회의 본질적 문제

는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논평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넥슨에서 해고된 성우는 페미니즘을 표방한 티셔츠를 사 입고 ‘메갈리아 4’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아 당했다. 즉, 넥슨이 자행한 해고는 정치 견해를 이유로 한 완전히 부당한 해고였다. 메갈리아에 아무리 비판적이라든, 메갈리아나 그 분파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처우를 옹호하거나 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면 견해와 사상에 따른 차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넥슨의 부당해고에 항의한 문예위 논평을 철회한 정의당 지도부의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8월 29일 심상정 상임대표 상무위 모두 발언)이라며 진정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예위의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이 온당치 않은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종합

메갈리아에 대한 주장들은 흔히 편향된 경향이 있다. 즉, 메갈리아 주장의 형식만을 보며 메갈리아를 ‘일베’같은 반동적 집단으로만 취급하거나, 메갈리아가 성차별에 반발한다는 점

에만 주목하며 그 약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메갈리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비판적 지지다. 메갈리아는 분명 성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의 일부이다. 메갈리아는 남성잡지 《맥심》의 성범죄 미화 표지 전량 회수와 물가 범죄 항의 같은 몇몇 쟁점에서 긍정적 구실을 했다. 사회에 퍼져 있는 여성 비하와 멸시, 여성 신체의 대상화,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반발한다는 진정한 취지를 무시한 채 메갈리아를 ‘남성 혐오’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메갈리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반동적인 일베와 달리, 메갈리아는 성차별 쟁점이 아닌 다른 정치적 쟁점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일 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 상의 느슨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를 파시스트 집단에 비유하는 것도 파시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물론 메갈리아는 남성을 모두 적으로 여기는 분리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 심지어는 성차별에 진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메갈리아의 ‘미러링’ 방식은 성차별에 맞서는 데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

기 쉽다. 모든 남성을 적대시하며 욕설하고 조롱하는 방식은 후진적 남성을 설득하기보다는 소모적 논쟁을 부르기 일쑤다.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상당수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메갈리아가 결국 분열했음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메갈리아의 극단적으로 분리주의적인 페미니즘은 성차별이 어디서 비롯했고, 왜 유지되는지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관계와 분리시켜 이해하다 보니 성차별을 끝장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어렵다.

메갈리아에 대해 지나치게 불비례적인 비판과 무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Q&A

– 7월 19일, 게임사 넥슨 ‘메갈리아 4’ 후원 티셔츠 인증사진을 이유로 한 성우를 해고함.
–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 해고에 대한 항의성 논평 발표.
– 7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문예위 논평 철회 시점 & 젠더TF 구성했다고 발표.
– 8월 16일, 정의당 젠더TF, 사업계획안 발표.
– 8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최근 당내 현안과 관련한 상무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 8월 26~29일, 정의당 젠더TF 위원들, 7명 가운데 5명이 연이어 사퇴.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이현주

8월 26일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2015년 1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성희롱과 성희롱 신고 이후 각종 불이익 조치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측의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사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의 의의를 짚어보면서 동시에 한계와 보완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였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측이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는 2012년부터 1년 넘게 직속 상사인 팀장한테서 성희롱에 시달렸다. 고심 끝에 피해자는 사측에 성희롱을 신고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사직 종

용,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등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 조치들이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부당 조처는 더 심해졌다. 징계, 핵심 업무 배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하위 등급의 인사고과 등등. 피해자를 도와 진술서를 쓴 후배 동료 역시 사측의 눈엣가시가 돼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의 대상이 됐다.

2심 판결 이후에도 불이익 조처는 지속되고 있다. 사측은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피해자의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다. ‘자성고지 해고’를 가능하게 한 노동계약 지침 때문에 최하위 고과는 피해자의 실제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2심 판결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의 업무 변경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임을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단지 성희롱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연철 법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 전까지 사용자 책임이 논란된 모든 성희롱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적 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 ‘사무집행과 관련한 해석(업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에 와서야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해, 8건의 사건에서 점차적으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에 비해 봤을 때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사용자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은 1990년대 등장한 판례와 같은 수준으로, 시대를 역주행한 판결이다.”

업무관련성

법적으로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성희롱 행위와 사무집행(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가해자의 공식적인 직무범위와 직무권한 내에서 업무 변경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임을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단지 성희롱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연철 법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 전까지 사용자 책임이 논란된 모든 성희롱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적 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는 “성희롱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부연구위원)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 이 점에서 발표자들은 2심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래 하던 핵심 업무에서 제외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성희롱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를 ‘불리한 조치’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한 직원이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

에 유포했던 것도 불법행위라며 이것도 사측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물론 2심 판결에는 한계도 있다. 재판부는 업무 변경을 제외한 그밖의 조치들 - 피해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 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과는 별개라며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표자들은 이 행위들이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 보복성 조치들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여전히 “불리한 조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우려다 부당한 처우를 당한 동료 노동자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불리한 조치”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들이 다양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사장이나 상사에 의해 벌어진다는 점 때문에 많은 피해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묵살되기 일쑤다. 피해자가 도리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측이 성희롱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를 ‘불리한 조치’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징계, 대기발령,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심각하게 벌어진다.

응답자의 78.4퍼센트가 성희롱 발생 시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또한 성희롱 발생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제직상태가 변화된 비율이 36.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는 “불리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규정,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 노동자

본지 174호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르노삼성자동차 사례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그 이후 대처에서 드러나는 사측의 부당함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이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판결이 난다면,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우고 있거나 싸우려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법원에서 피해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지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조합의 쟁점이 되도록

공통 이슈로 삼아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료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에 항의해 다른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가 함께 싸운다면, 경영진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항의가 생산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성희롱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관련 기사: 본지 166호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광석을 두드려서 강철을 만든다” 1959년에 만들어진 포스터.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이장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듬해인 1950년 5월 1일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염원인 토지개혁과 더불어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준 새 헌헌법이 공표됐다. 헌헌법은 부권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천명하면서, 일부다처제나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2인자인 저우언라이의 부인이자 전국부녀연합회*의 부위원장이었던 덩잉차오는 “여성해방은 여성에게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산당 간부들에게 헌헌법을 학습시키고 남녀교제의 자유와 미혼 남녀의 연애의 자유를 강조했다.

신중국은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강력한 국민국가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더욱이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보며 마오쩌둥은 소련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결과가 1955년부터 시작된 인민공사 추진과 1958~60년의 대약진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걸모습과 달리 인민공사 내에는 여성차별이 구조화돼 있었다. 인민공사에는 ‘노동점수체계’가 시행됐는데,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루 7~8점밖에 벌 수 없지만 남성들은 9~10점을 벌 수 있었다. 마오쩌둥이 말한 세 가지 격차(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외에도 또 다른 격차가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여성 차별적 노동점수체계는 여성이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수 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진정한 관심사는 남녀평등이나 여성 해방이 아니었다. 여성 노동력을 생산성 향상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1958년 대약진운동을 시작할 당시 “사람의 입은 한 개지만 손은 두 개다” 하며, “생산 현장에서 6억의 인구는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여성들의 출산이 장려됐다.

1959년 인민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여성의 95퍼센트가 인민공사에 소속돼 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 등에서 남성 노동자들과 큰 구별 없이 노동을 했다. 당시 가사노동을 줄여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공동 식당, 공동 세탁소, 공동 탁아소 등이 설치됐다. 또, 여성을 끌어내기 위해 ‘시대’는 변했다. 남녀는 평등하게 됐다. 남성 동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성 동지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널리 확산됐다. 이런 배경에서 ‘철의 처녀’나 ‘덴발의 의사’ 등 영웅적·현신적 여성상이 많이 배출됐다.

그러나 이런 걸모습과 달리 인민공사 내에는 여성차별이 구조화돼 있었다. 인민공사에는 ‘노동점수체계’가 시행됐는데,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루 7~8점밖에 벌 수 없지만 남성들은 9~10점을 벌 수 있었다. 마오쩌둥이 말한 세 가지 격차(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외에도 또 다른 격차가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여성 차별적 노동점수체계는 여성이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 8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Robert Scott (플리커)

▶ 7면에서 이어짐

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됐지만, 남녀평등의 구호 하에 중공업 육체노동 일자리에 여성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것과는 모순됐다. 많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듯이, 중국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이 차지했고, 국유기업에서 해고할 때도 여성이 우선 대상이었다.

개혁 개방과 여성 처지의 변화

1978년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과 함께 매매혼, 축첩, 성매매 등 악습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화됐다. 여성은 계절에 관계없이 늘 치마를 입어야 한다거나 여성은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횡행했다. 이 주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논리로, 또 회사 이미지 향상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됐다. 여성은 부드럽고 우아하게, 남성은 낮고 힘찬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주장,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몸과 목소리를 꾸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근 후난성에 속한 한 현의 책임자는 이런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 현에 있는 젊은 여성 7만 명이 광둥에 가서 일합니다. 그들 중에서 최소한 1만 명은 매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양판(楊帆)은 전국에 ‘유흥업소 접대부’ 여성이 5백만 명 정도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성 산업이 됐다고 주장한다. 절대 수치로 보면, 중국이 성매매 여성 수에서 세계 최고라는 주장도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할 당시 중국 지배자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경제성장으로 먹여살릴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인구 증가였다. 대약진운동 때와 달리 이제는 많은 인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한 자녀 정책이었다. 1980년 개정된 새 혼인법은 제2조에 “계획출산을 실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제12조에 “부부 쌍방은 … 계획출산을 실행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새 혼인법은 “남성이 여성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고(데릴사위제), 아이가 부모 중 어느 쪽의 성을 붙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했다. 중국의 전통적인 부계제와 남아선호 관습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여성과 여성 노동자의 처지가 중국 지배자들의 말과 달리, 남녀평등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종속돼 있음을 1980년대 중반에 벌어진 ‘부녀회가’(婦女回家) 논쟁이 여실히 보여 줬다. 부녀회가의 핵심은 노동력은 많아졌지만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8년 전국부녀연합회가 발간한 〈중국부녀〉는 시장개혁으로 부유해진 농촌에서 여성이 전업주부로 전향한다는 르포를 자주 실으며 부녀회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식을 가진 여성을 집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이 여성의 인간으로서 자립과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녀회가 논쟁은 수그러들었지만, 파트타임, 계절성 취로, M자형 취업 등의 일자리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오늘날 중국 여성의 현실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다.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들(농민공)이 이 필요를 충족시켰다. 농민공의 절반은 여성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폭스콘 공장이 잘 보여 준다. 폭스콘은 애플의 부품업체로 중국에 네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80만 명의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늘어나도 남녀 간 격차는 여전하다. 농민공 내에서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대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여전히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아래의 사례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는 중국의 현실을 일부만 보여 줄 뿐이다.

첫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과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다. 전국 도시 여성 실업률이 2005년 50퍼센트, 2006년 48퍼센트로 상당히 높다. 2000년 15~60세 여성의 실업률은 9.64퍼센트로 남성 실업률의 1.91배에 이른다.

둘째, 남녀 간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 도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1988년에는 남성의 84퍼센트였지만, 1995년에는 82퍼센트, 2003년에는 81.9퍼센트로 계속 줄었다. 전국으로 보면,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5년 남성의 67.7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농촌 여성은 도시 여성보다 소득도 낮고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더 크다. 2005년 도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72퍼센트였지만 농촌 여성은 65퍼센트였다.

셋째, 노동시장에도 남녀 불평등이 존재한다. 국유기업이 사영기업보다 남녀 임금 격차가 작긴 하지만,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의 구조조정 일차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넷째, 사회보장에서 여성은 불이익을 받는다. 여성은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남성보다 5~10년 일찍 퇴직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제공받는 의료비, 의료보험, 퇴직금, 노후연금, 실업수당, 상해보험, 유급휴가, 주거비수당, 유급병가 등을 남성 노동자들보다 적게 받는다.

여성의 농업 의존도가 크다는 점

도 소득과 사회보장 등 사회경제의 자원분배에서 여성이 불리함을 의미한다. 2005년 수정된 부녀권익보장법과 2003년 농촌토지정부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토지사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소득이 호구 단위와 호주 명의로 분배되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빈곤 인구 비율도 남성보다 좀더 높다. 여성 절대빈곤 인구 비율은 2005년 8.48퍼센트, 2006년 7.3퍼센트로 남성에 비해 각각 0.28퍼센트포인트와 0.34퍼센트포인트 더 높다. 또 여성 저소득층 비율도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현실은 중국이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며 착취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Q 용어설명

전국부녀연합회

1949년 3월 제1차 중국부녀 대표자대회가 열렸고, 그 결과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이 결성됐다. 1957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부녀연합회(부녀련으로 약칭)로 이름을 바꾼 이 조직은 중국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공적 여성조직이다. 그 목적은 덩잉차오가 대표자대회에서 한 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임무는 주로 여성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도시의 경제 건설에 적합한 각종 생산 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시기에 사회적으로는 남녀평등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오히려 이 조직은 붕괴 상태에 있었다. 여성을 생산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1978년 부녀련은 여성 권리의 옹호자처럼 비치며 재건됐고, 1995년에는 제4회 국제연합 세계여성회의의 NGO 포럼을 주관했다. 부녀련은 〈중국 부녀〉를 발간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양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5만 원 이상 ()원 ☐ 기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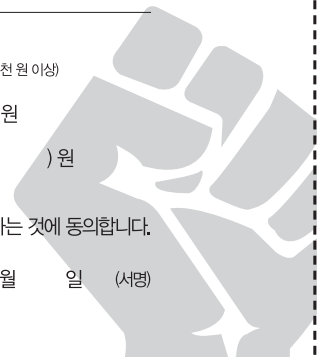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9·23 총파업은 정당하다

김문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에 맞서 9월 23일 하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민간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행장들이 주도해 금융노조와의 산별 임단협 교섭을 파탄냈다. 8월 26일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의 23개 기관이 모여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사측이 밝힌 탈퇴 이유는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고 총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금융노조 각 지부별로 각개격파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지난 3월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이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한 일을 보면, 사측 도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공기업 사측은 정부가 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공기업 가이드라인 시한에 맞추려고 대대적인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

노조와 합의를 추진하는 대신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직원 개개인들에게 받아내려 한 것이다. 승진, 인사고과, 인간관계, 왕따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가해졌다. 그 과정이 어찌나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는지 산업은행 한 노동자는 “정신적 강간”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치욕”, “모멸”, “희롱”, “부담”, “당혹”으로 묘사했고 “솔직히 .. 너무 무서워요. ㅠㅠ” 라고도 했다. “일제시대”, “유신”, “공산주

Q 용어설명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이 단체는 산별 임단협 교섭의 '제도화'(정책을 위해 2010년 노사 합의로 만든 사용자측 연합이다. 34개 기관이었으나 올 봄에 금융공기업 7곳이 탈퇴해 27곳이 남아 있었다.



단결 투쟁 사측이 산별 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의”에 비유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그 금융공기업 일곱 곳의 CEO 연봉이 최소 2억 5천만 원을 넘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3억 7천, 3억 6천만 원이 넘는다.(기본급은 다들 비슷해 2억 원가량이다.) 시중은행 행장들은 이보다 연봉이 훨씬 더 세다. 연봉은 물론이고 ‘지성과 품위’를 갖춘 최고 엘리트 행세를 하던 금융권 CEO들이 노동자 임금을 쥐어짜는 데선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옛날 구로나 청계천의 배불뚝이 사장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심지어 노조가 그런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려고 찬반투표를 해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왔는데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이 노조로 조직돼 있으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다.

더민주당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산관리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자신들의 행동이 대법원까지 갈 불법(의소지가 분명한) 행동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직원 개개인들부터 지부 집행부에 게까지 가해진 전방위적 압박은 일부 취약한 공기업 지부를 흔들었다. 한국감정원지부는 집행부가 총사퇴해야 했고, 주택금융공사지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하고는 금융노조를 (징계 직전에) 탈퇴했다.

원칙

정권과 사측이 그렇게까지 막부가 내린 것은 세계경제가 언제 금융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 미리 임금을 낮추고 인력 감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의 반대를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도 금융노조와 노동자들이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분노는 커져 왔다. 금융노조와 대부분의 지부도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반대라는 원칙을 지켜 왔다.

금융노조는 노동절과 6월 18일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정권과 사측에 항의했다. 지부별로 사측을 고소하기도 했다. 휴가 중인데도 87퍼센트가 참가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5.7퍼센트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9월 10일에는 전 지부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9월 23일에 하루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파업에 각 지부별 90퍼센트 이상 참가 지침을 내리는 등 총력 동원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이 집회에 대거 참가하고 파업 지지가 높은 것은 성과주의의 폐해를 경험으로 이미 알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대량 감원 폭탄을 맞았던 금융 산업은 2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후에는 금융회사들 스스로 경쟁체제를 강화해 왔다.

은행 간 실적·비용 경쟁이 심화하면, 경쟁적 인력 감축, 직원 간 경쟁과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는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파다 대출이나 불완전판매 같은 금융 사고 등을 초래하기 십상이다.(2008년 ELS 펀드 사태 등) 이런 배경에서 성과연봉제도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집단성과급이나 비조합원 상위직급부터 개별성과급을 도입하는 형태로 조금씩 도입돼 왔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영업점 철문을 내려도 해피콜이니 뭐니 하면서 개별 영업 행위를 해야 하고, 줄어든 인력 탓에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한다.

대략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빨라도 저녁 9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니, 성과경쟁의 스트레스 속에서 적어도 하루 열두 시간을 직장에 잡혀 있는 셈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성과연봉제가 무엇을 뜻할지는 뻔한 일이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것은 집단적 투쟁뿐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두드러졌던 시중은행들의 전면 파업들은 더한층의 구조조정을 막는 효과를 내 왔다.

올 봄 공기업 인권유린 행위들이 벌어질 때, 조합원들은 노조에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님. 점거농성이라도 해야 투쟁의 힘 받지 무너질 듯”, “개개인의 히스토리를 모두 들고 있는 인사팀 직원과 독대하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꼭 와 주세요” 하며 도움을 요구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당시 금융노조와 지부들이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측 압력에 개별로 노출되면 노동자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지부 집행부가 찬반투표에 패배한 것도 집행부 자신이 원장에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사측의 입김이 더 먹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사측의 교섭 해태는 이미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파업 조직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한 산업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을 멈추는 파업은 확실히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9월 하루로 안 되면, 10월 파업 등 계속 파업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시중은행 행장들의 집단적인 교섭 거부는 역으로 총파업 성공의 관건이 시중은행에 있음을 보여 준다. 시중은행 빅4(국민, 하나, 신한, 우리)와 NH농협 등이 약속대로 파업을 제대로 조직해 전국의 점포 수천 곳이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운동 전체를 고무할 수 있다. 금융노조와 지부들은 정권과 사측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고 약속대로 총파업 조직화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투쟁을 단호하게 조직해서 양 노총의 투쟁이 서로를 고무한다면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별 교섭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지 말고 파업 건설에 집중해야

금융산별에 속한 사측의 행보를 보면, ‘공공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 통속인 것이다.

막강한 권한의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선봉장이다. 상반기에 금융공기업을 직접 압박하던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하반기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민간 시중은행을 압박해 왔다.

더민주당 조사에서 공개된 자산관리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해야 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에서 개정안 또는 정부 권고안을 의결해야 할 필요성,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 “정부는 조기 도입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즉 불법인 줄 알지만, 일단 정부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회의 내용인 것이다.

노동부는 4월에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하

지침을 내렸다. 7월말에는 정부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악해 성과연봉제 도입의 길을 열었다. 그러자 시중은행 사용자들은 법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총파업 관건

금융노조는 시행령이 임직원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규정하면서 오직 성과보수 지급대상에서만 대상을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했다고 정부의 꼼수를 지적했다.

애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의 지나친 성과 보수가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걸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다. 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개악을 한 것이다. 물론 너무 명백한 무리수라서 임종룡조차도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해당 시행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규정 아니며, 성과연봉제는 노동법에 따른 노사 합의의 사안이라고 답해야 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 경영진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정부의 조처를 이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법의 명령이라

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정부와 사측이 한통속이라는 것은 산별로, 양대노총 연대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된다.

이제 사측은 개별 동의서, 불법 이사회, 개별 집행부 회유 등 온갖 공작을 벌일 것이다. 특히 이런 압박은 파업 전에 집중될 것이다. 9·23 총파업이 무력화되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의 구심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조와 각 지부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개별 교섭에 절대 응하지 말고 오로지 산별 총파업 건설에 복무해야 한다.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설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이 40일 가까이 돼 간다. 사측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투쟁을 진압하지 못한 채 공장 밖에 밀려나 있고, 노동자들은 곳곳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파괴 전략이 폭로되면서, 더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적지 않다.

갑을오토텍 투쟁은 시작부터 많은 노동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를 비집고 솟구쳐 오른 이 투쟁은 금세 노동개악과 노조 파괴에 맞선 투쟁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장악하고 생산을 마비시켜 점거파업의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단호한 투쟁은 많은 이들에게 지배자들의 위기를 이용해 싸우면 승산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실제 갑을오토텍 사측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특히 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추자 현대중공업, 방산업체, 해외 기업들에 납품할 부품 공급에 차질이 크게 빚어졌다. 박근혜 정부도 심각한 정치 위기와 자체 내분 격화 등으로 경찰 투입을 주저하자 사측은 똥줄이 타서, 8월 11일 전격적으로 '용역경비를 철수시킬 테니 관리직의 생산 재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실질적인 연대 파업이 결합됐다면, 사측을 더 궁지에 몰아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체생산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 투쟁으로 사측이 아직까지 생산 재개의 물꼬를



최악의 폭염을 지나 가을이 와도 투쟁 대오를 유지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

트지 못하고 있지만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에 단협 해지까지 통보했다. 사측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숨 쉴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그동안 세 차례나 공장 내에 있던 물품 반출을 허용했다.

최근 갑을오토텍지회가 불법적 대체생산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발표했는데, “갑을 참고가 불법 대체생산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2~3차 하청 업체들에서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물량이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갑을오토텍 창고로 모여 현

대·기아차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을 틀어막아 타격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부품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키면, 정부와 보수 언론의 ‘불법’ 비난이 거세지고 이것이 경찰력 투입의 발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당장의 충동을 피하려고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 갇히면 우리 쪽의 힘도 약화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 자신의 힘보다 사회적 여론이나 국회를 더 의식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 지도부는 그동안 연대 파업보다 국회를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국회 세력 관계

상 이는 더민주당 등과의 공조 추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더민주당 대표가 된 추미애는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손잡고 잇따른 노조 파괴 공격의 발판이 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충남 도지사 안희정은 유성지회 투쟁 당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권리’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믿을 만한 우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국회 대응을 하면서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투쟁의 힘을 극대화해야 사측과 정치권 모두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투쟁을 시작했으면 전력을 다

해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명한 군사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투력의 집결”, “힘의 집중”이 가장 중요한 전투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가늘고 길게 싸우는 투쟁의 장기화는 사측에 여유를 주고 우리 쪽의 대열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갑을오토텍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속노조·현대기아차·부품사 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기층 노동자들을 향해 연대를 호소해 나가야 한다. 금속노조 집행부도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집트 정부의 파업 노동자 군사재판 회부

커지는 불만에 탄압으로 대응하는 독재 정권

이집트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국제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8월 14일 발표했다. ‘알렉산드리아 조선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26명이 지난 5월 체불된 상여금 지급, 임금 인상,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과 연좌 시위를 벌인 것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에 항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공개서한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 참조).

이집트 지배자들은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지는 국면에서 파업 노동자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해 온 전력이 있다. 독재자 무바라크를 끌어내린 2011년 혁명 직후인 2011년 6월, 정규직화와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국영 석유기업 노동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당시 노동자들은 재판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번 탄압도 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점차 커져가는 것이 그 배경이다.

현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조선소에서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2016년 5월.

는 2013년 여름,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1천여 명을 백주대낮에 학살하고서 집권했다. 당시 엘시시는, 혁명 후 들어섰지만 무능한 이슬람주의 정권에 대한 대중적 환멸과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일부 좌파들의 혼란(‘이슬람주의자들보다는 군부가 낫다’는 혼란)을 이용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엘시시 정권의 위신은 크게 낮아졌다. 무엇보다, 아랍 혁명의 발단이 된 경제 위기가 계속 심각하다. 최근 이집트는 IMF에게서 구제금융 1백20억 달러를 받아야 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쁘다.

그래서 엘시시 정권도 전임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상대로 혹독한 진축을 밀어붙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관찰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는 “이집트의 경제 위기는 엘시시 탓”이라고 투덜거렸다.

이런 위기 때문에 이집트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과 민영화 조처에 반대해 노동쟁의를 벌여 왔다. 올해 1~4월 노동쟁의가 하루 평균 6건씩 벌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조선회사’ 노동자들의 쟁의도 불황 때문에 최저임금(공공부문에만 적용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온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

더욱이, 이런 위기를 바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목소리도 전보다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엘시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홍해의 섬 두 개를 양도하기로 발표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그 징조였다. 시위

참가만으로도 징역 5년 형까지 언도될 수 있는 나라에서 당시 시위로 체포된 사람만 수백 명에 달했고, 상당수는 무죄로 풀려났다. 엘시시가 집권 직후 공포정치를 펴면서 시위금지법을 이용해 수많은 반정부 활동가들을 무거운 징역형에 처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 조선회사’ 파업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은 서서히 회복되는 이집트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고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이집트 현지에서 정당과 사회단체 10여 곳, 2백 명이 넘는 노동조합 활동가, 변호사 등이 파업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단체 ‘이집트연대’는 파업 노동자들이 다음 재판을 받기 이를 전인 9월 16일을 ‘행동의 날’로 정하고 연대 메시지와 항의 행동, 자신이 속한 노조 지부에서 규탄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종환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김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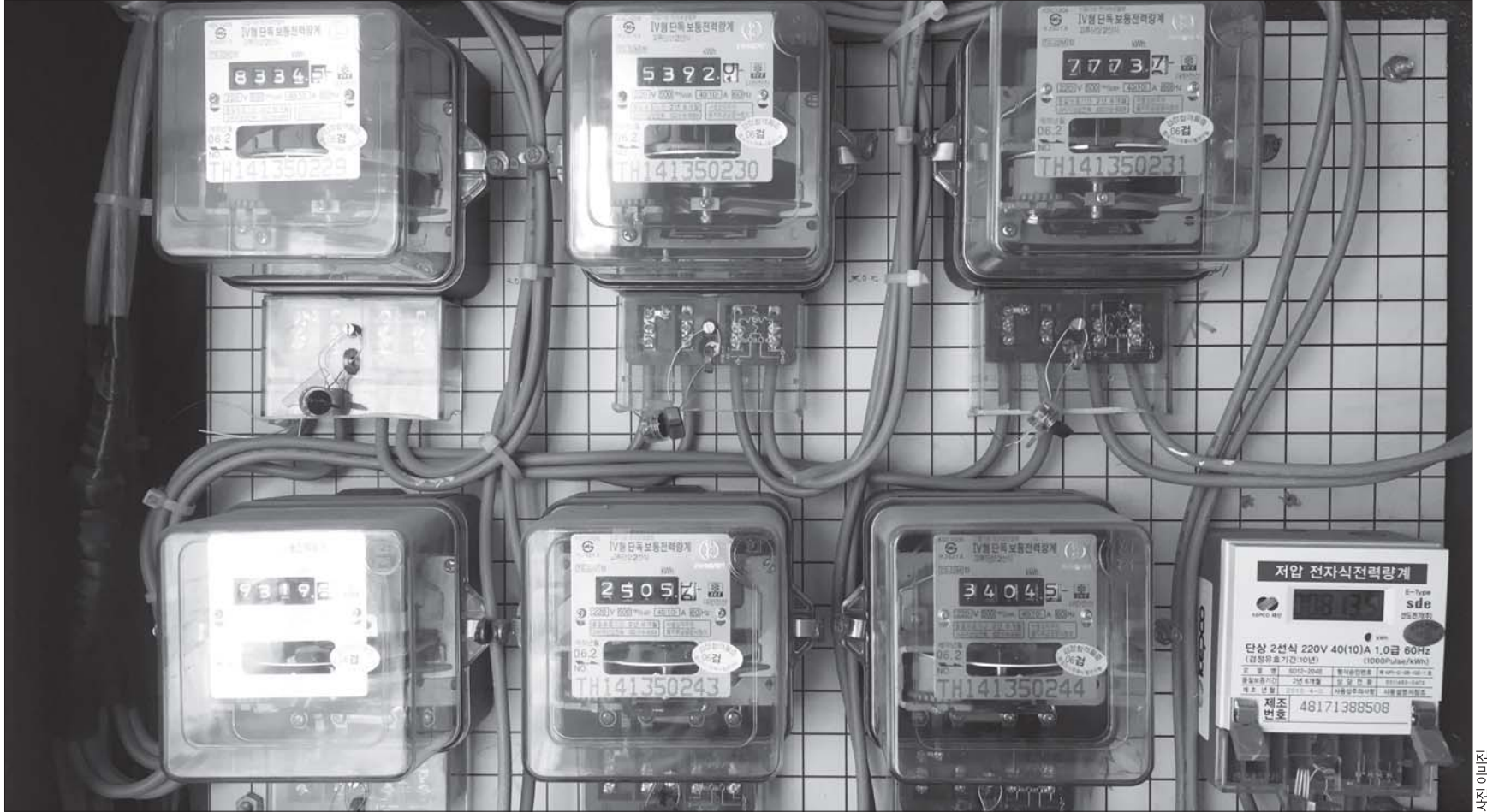
더운 날씨는 한풀 꺾였지만 9월에 나올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오랫동안 정부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텼다. 평범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호도하며 고통을 떠넘겨 온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오래 전부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진정한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 이익을 최고의 우선 순위로 여기는 체제의 작동 방식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절반

단적으로, 지난해 산업용(공공·영업·농어업용은 제외한 공업·광업용을 가리킴) 전력은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57퍼센트), 주택용 전기는 14퍼센트밖에 안 됐다. 또,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사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주택용 전기에 비싼 값을 매기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해 왔다. 제한적으로나마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들은 2004년 한 해에만 전기요금을 사실상 원가보다 5천억여 원이나 덜 낸 반면, 같은 해 주택용 전기요금



무더운 여름, 전력량계 눈금을 확인할 때만큼은 실로 오싹했다.

은 원가보다 6천억 원이나 더 내 사실상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보조”했다.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이 대폭 상승하는데 반해, 산업용 전기는 계약 전력량이 클수록 되레 싸진다. 그래서 산업용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상위 12퍼센트 기업은 나머지 기업들보다 전기요금 단가가 싸다.

그러므로 유독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면이 있다.

그런데 진보·좌파 진영 일각에는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누진제 폐지가 저소비·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거나,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구실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와 저소비·저소득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가정용 전기 생산에 드는 비용을 오로지 주택용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힐 까닭은 없다. 오히려 오늘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생활필수재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온 국민이 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누진제 폐지가 전기 사용량을 크게 늘려 더 많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비약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기 사용량 급증의 주범은 기업들이다. 화력발전소 증가는 풍력과 태양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등한시하고 기업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는 계급 문제

전기요금 문제는 계급 문제다. 물론 자본가들도 집에서 전기를 쓰지만, 그 요금은 자본가들에게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막대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매달 2천5백만 원이나 납부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더 놀라운 일은 그가 경영하는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할인받은 금액(4천2백91억 원)이 그것의 5백 배에 달한다는 것이다.(박주민 의원실)

반면에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은 공장과 사무실의 전력 사용량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집에서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거나 살인적인 더위를 견뎌야 한다.

생태 위기는 대중의 전기 사용 탓인가?

일부 생태론자들의 누진제 폐지 반대 의견의 배경에는 생태 위기에 대한 진지한 우려가 있다.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생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그들의 걱정에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

우선 누진제 같은 전기 소비 억제책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전기를 흥청망청 쓸 것이라는 가정이다. 물론 전기 사용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물의 경우, 한국의 수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서울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주요 도시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하고, 지난 10여년간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태도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다. 갈수록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불가피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전열기가 연탄을 대체한 것은 한 사례다.

기후변화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셋톱박스처럼 변화하는 자연·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의 사용이 증가한 면도 있다. 기후변화가 야기할 번덕스러운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당분간 늘 가능성이 크다.

일부 생태론자들은 정부의 기술주

의적 ‘해결책’에 반대한다. 정부가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기술 개발의 효과를 과장하며, 이젠 석탄 발전소가 청정 에너지원이 됐다거나 핵발전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분명 타당하다.

환경 친화적 냉·난방 기술 개발은 뒷전에 미뤄둔 채, 개별 가전제품 판매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기술주의적 해결책에 반대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절약을(요금이라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요구하는 것은 공상적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 대안은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기술주의적 해결책의 진정한 문제는 기술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늘날 생태 위기의 핵심인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인 철강이나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엄청난 전력을 쓰는 반면,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해도 일반 가정의 냉방용 전기 사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다. 저소득층일수록 단열이 형편없는 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제품을 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또 다른 문제는 역사적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그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만으로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넉넉히 생산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관계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며, 기술주의적 관점에 반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거부하지 않고, 생태 위기 해결에 유용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분

한다.

민주적 계획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단열 주택과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보급하고, 무계획적 산업 생산을 통제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소재지



배딕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마틴 잼스 지음, 김종환 옮김, 노동자연대
80쪽, 3,000원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이정원

6월 초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1백20곳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그 뒤 지방공기업 1백37곳에도 도입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수용을 거부하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사회를 열어 강행했다.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가뿐하게 무시됐다.

오죽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도 정부의 2대 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쉬운 해고 허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며 막무가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와 같은 ‘기준’을 확립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싶어 한다. 법률적 논란과 노조의 반발을 묵살하는 이유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노조들이 계속 거부 투쟁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듯도 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수익성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사용자의 통제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즉 착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 공격은 노동개악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선이다. 올 초 경총 회장 박병원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해고도 명예퇴직도 필요 없다’ 하고 말한 데서도 기업주들의 속연임을 알 수 있다.

수익성

특히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강화는 공공부문 운영에서 수익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과 직결된다. 가장 흔한 방식은 정규직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전임 코레일 사장에서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승진’한 최연혜가 철도에서 흑자를 낸 ‘비법’이다.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철도공사에서 정규직은 8백37명이 줄었고, 간접고용인 용역 노동자는 6백5명이 늘었다. 전체 인력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

이미 공공기관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다. 수익성을 더 우선시하면 가장 열악한 처지인 간접고용 비중이 더 늘 수밖에 없다. 동시에 공공기관 적자를 줄인다고 공공 요금 인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성과 평가는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노조들의 조직력을 적극 사용해 “해고연봉제”를 저지하자.

사용자들의 압력에 맞서기 더 어렵도록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징수율이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 성과 평가가 강화되면 연체자들에게 가압류 등 비인간적 압박을 하도록 더욱 내몰릴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원은 민간 제약사들이 외면한 희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약을 생산해 왔는데, 최근 “경제성 있는 품목”이 아니라며 치료약 생산에 난색을 표했다. 약 생산이 중단되면 소아암 환자들은 심한 후유증이 동반되는 전신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강요하면, 서비스 질이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공기관 노동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를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정당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이 공공부문 투쟁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

9월 공공부문 파업

9월 하순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과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9월 23일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월 27일부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과 공공연맹도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7회철폐 지침 폐기, 이사회 의사결정 무효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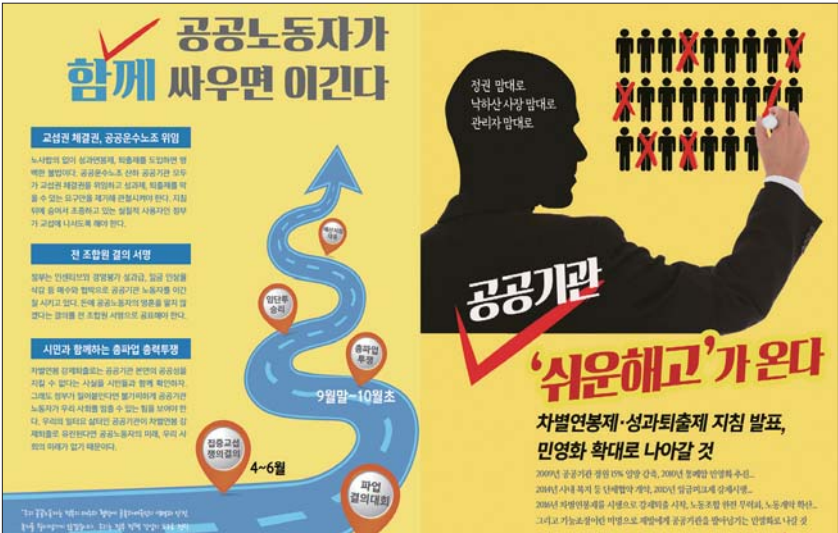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4월 총선에서 정부가 참패하자 정부에 맞서 싸울 불 만하겠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분열은 첨예하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범여권의 위기감 때문에 정부가 극심하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싸우는 지경이다.

지배자들의 갈등과 분열을 기회로 삼아 투쟁을 전진시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의 위기를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고 투쟁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하면 지지를 모으는 데 유리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지키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확충은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것들이다. 80여 단체가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을 만든 것도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가장 잘 조직된 부문이다. 노조 조직률도 59퍼센트다. 역대 정부들은 공공부문 공격을 ‘개혁’의 지표로 내세웠지만, 공공부문 노조들의 저항 때문에 그 계획들은 종종 좌절됐다.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는 부분 추진에 머물렀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



“정권 맘대로·낙하산 사장 맘대로·관리자 맘대로”

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간부들에게만 적용됐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조들의 조직력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서비스제공을 중단시키는 것도 마다 않고 싸워야 양보를 얻어 낼 확률이 커진다.

2013년 철도 파업이 그토록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필교 파업을 고수함으로써 파업 파괴력이 크게 떨어져 결국 민영화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던 것을 곱씹어야 한다. 철도 파업 이후 다시 전열을 갖춘 정부는 공공부문에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한편, 공공부문 파업과 투쟁이 벌어지는 9월은 여소야대 국회가 본격 진행되는 시기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기대할 지하다.

그러나 최근 더민주당이 세월호 특

별법 개정 열망을 배신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 요구에서도 후퇴하며 정부 승용을 띄어준 점을 봤을 때, 더민주당에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점에서 공공운수노조 집행부 등이 더민주당에게 노사정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 설사 국회에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된다 해도,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야당이 주도하는 기구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논의를 도출해 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서 봤듯이, 더민주당이 많은 경우에 노동자 투쟁에 교란 요인이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따라서 9월 공공부문이 실제 파업에 돌입해 강력한 힘을 보여 줄 때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